

# 결혼·출산 '인센티브' 고령자엔 '일자리'...국민연금 제도 개선

### 4대 공적자금 2040년 적자전환...퇴직·개인연금 등 연계 제도 보완 '저출산 심각' 청년층 세제·금융지원 정비...고령자 고용인프라 확대

정부가 향후 4대 공적연금 적자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필요시 국민연금 제도개선 검토...퇴직·개인연금 등 연계 방안 마련=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미리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기로 했다.

◇'저출산, 이대론 안 된다'...결혼·출산 인센티브 강력 보완=저출산 문제를 단기간 반등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할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유지 활성화,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제각기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한다

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풀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한다...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제계가 난색을 보

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해서도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미래 고령층이 될 신(新)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 인력 활용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적 외국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세제 등 지원을 검토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임직원들이 10일 지역본부에서 '공명선거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

### 공명선거 준수·윤리경영 결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임직원 중립을 지키자는 '2022년 공명선거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10일 열었다.

이날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회에는 박서홍 본부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선거 관여를 하지 않고, 공직 선거법과 농협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날 초 전남지역 농협 시군지부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지도했다.

한편 전남본부는 내년 3월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7월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수송장비 수출 2년 연속 증가세

92억8277만 달러·6.8% ↑

광주·전남지역의 수송장비 수출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수송장비 수출은 92억8277만 달러로 전년(86억9385만 달러)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광주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59억5366만 달러, 전남은 8.7% 늘어난 33억2911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수출 실적과 추세를 보면 광주·전남의 수송장비 수출은 2019년까지 계속해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수출 실적은 85억7560만 달러, 2018년 82억2389만 달러, 2019년 78억3054만 달러로 전

년 대비 각각 16.6%, 4.1%, 4.7% 감소하다가 2020년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품목별로 광주지역은 자동차 부품(153.2%), 화물자동차(22.9%) 등에서 수출이 늘었고 승용 자동차(-1.6%)는 줄었다.

전남은 선박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13.1%), 화물자동차(-65.2%), 기타 수송기기(-13.0%) 등은 감소했다.

광주에서는 승용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송장비 부문에서 84%를, 전남은 선박이 99%에 달하는 등 두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올해 지역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지속돼 증가를 낙관하기 어렵지만, 선박 수출은 고부가가치의 LNG 선박 수주가 남아있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상의, 이판식 광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 세정지원제도 확대 등 요청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기업 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 ▲기업승계 지원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2020년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광주상의는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기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5건의 세정요구를 광주국세청에 전달했다.

정장선 광주상의 회장은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산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취약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